

與野, 산불피해 대응책 논의 와중에... 재난 예비비 두고 이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 회의 피해복구·이재민 지원에 당력 집중 “예산안 삭감에 재난 예비비 부족”

민주당 산불피해 지원 TF 구성 신속한 산불진압·피해 복구 요청 “이미 재난대책비 편성돼 있어”

경상권의 산불 피해가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가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 편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확보에는 대립하고 있어 재난 앞에서도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비상 상황 점검과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대한 여야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주로 경상권에 집중된 이번 산불은 27일 오전 6시 기준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피해를 냈다. 과거 1989년 26명, 1995년 25명, 1993년·1996년·1997년 각 24명, 1994년 18명 순으로 산불 피해가 컸지만, 2025년 산불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불의 피해규모는 오전 기준 3만6009ha를 넘어 서울 면적의 60%를 집어삼켰고 이재민의 수도 3만명을



권영세(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이만희(왼쪽)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흘쩍 넘겼다.

여야는 각각 특위를 만들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논의하고 여야 지도부는 산불 진화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거나 직접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1차 긴급회의를 열고 예산 확보와 피해 복구·이재민 지원 등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정부에 현재 경북 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을 경북 안동·청송·영양 등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추경안 편성시 재난 예비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장기

적으로 산불 진화용 대형 헬기 구입, 헬기 임차비용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병도 재난재해대책특별위 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과 전날(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 등을 찾아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당국에 신속한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를 요청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시 재난 복구를 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둔 돈을 의미한다. 주로 목적 예비비가 사용 용도를 예산총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재해대책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나 환차손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 정도 예비비가 통과됐었는데, 지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서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재난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지금 1조 5000억~6000억원이다. 재난 하나에도 많은 예비비가 필요한데, 야당과 적극 협조해서 추경 편성 때 재난 대응 예비비가 늘 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참고로 지난해 강릉 산불이 났을 때 예산이 4500~5000억원 정도 소요된 것 같다”며 “재난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소요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1조 5000억원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것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추가적 예비비 편성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무죄’에 발 묶인 與... 野 공세 강화할 듯

정쟁 멈추자던 與, 2심 재판부 비판 사법부·헌재 엮어 색깔론 꺼내기도 조기대선 대비 李 사법리스크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서는 당혹감이 감돌았다. 1심 판결인 징역 1년·징역유예 2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와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물론 아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가장 우려했던 재판 중 하나가 어느 정도 해결된 셈이라, 이 대표의 조기 대선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여권 잠룡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자”고 했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취재진들에게 “비대위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 회동’이라고 제시됐던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엮어 색깔론을 꺼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12·3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이 대표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정 지지율이 좋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여론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유죄만 기다리고 전략은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물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검찰이 상고했기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8개 사건으로 고소돼 5개 재

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 아직 여권에 반전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그래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진영 간 대결’을 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행보하던 여권 잠룡들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부분의 주자들은 대권 행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반면 이 대표는 야권 인사인데다, 무죄 판결로 부담을 덜었으니 조기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발이 묶여있는 여권 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인지 대선 주자들은 전날(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일제히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재산 늘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재산 1위’

경기 침체에도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그중 국회의원 162명은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231명이다.

국회의원 재산 증가자는 규모별로 5000만원 미만 증가자가 36명(15.6%), 5000만~1억원 미만 증가자가 33명(14.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증가자가 149명(64.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증가자가 12인(5.2%), 10억원 이상 1인(0.4%)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박 의원은 1년 전보다 19억8535만원 늘어난 360억35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의원의 배우자 명의 예금이 1년 사이 31억532만원 증가했다.

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 1·2위는 안철수·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33억4566만원 줄어 1367억89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27억7976만원 줄어 535억32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야 지도부도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여럿 있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재산이 1억5005만원 늘어난 45억7792만원을 신고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억9644만원 증가한 51억7521만원을 신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6만원 늘어난 12억6099만원을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보다 2613만원 적은 30억8914만원을 신고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억25만원 늘어난 29억6574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중 재산 감소자는 68인(22.7%)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감소자가 21명(30.9%),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감소자가 12명(17.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소자가 19인(27.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감소자가 6인(8.8%), 10억원 이상 감소자가 10인(14.7%)으로 나타났다.

가장 재산이 적은 의원은 정준호 민주당 의원으로 -11억2833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건물 13억원과 예금 3000만원을 신고했으나 27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재산 총액이 마이너스였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채무,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 등이다.

여야 의원들 중 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 가족이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한 의원은 총 52명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한 건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 배우자 명의 3억635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규 등록했다. /박태홍 기자